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해야”

오은미 전북자치도의원,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벼 적정 가격 매입 등 대책 세워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벼멸구가 남부지방부터 북상하여 내륙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전북자치도의 경우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7,187ha로 전체 벼 재배면적(104,344ha)의 6.9%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벼멸구 피해는 하루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히 피해 벼를 수매하겠다

는 것 뿐이다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이번 벼멸구 피해의 원인이 이례적인 폭염 등 기후재난에 의한 것임에도 정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병해충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벼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에 선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지금 전국에 확산된 벼멸구 피해는 명백히 이상기후로 인해 9월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임이 분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정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벼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피해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부문 모든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 역대급 폭염과 폭우에 이은 벼멸구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사면초가에 내몰린 상태”며, “정부는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른 척하지 말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태권도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위한 신청 서둘러야”

강동화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발의 남북 공동 등재에 대한 관심 부족 지적 “북한의 단독 등재 막기 위한 대책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을 전 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 사실을 7월에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2028년 에나 등재 신청이 가능한 것 이란 답변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강동화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 정부의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북한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라도 최 악의 상황을 막고 국기 태권도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지키고자 한다”라며, 대정부 건 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동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국기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가 북한의 신청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3월 등재 신청을 추진하고, 공동 등재 이전 까지 북한의 태권도가 단독 등재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그런데 등재 신청을 담당 하는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등

/이만호 기자

민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할 것”

국감 관련 “민생 회생 5대 대책 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검이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미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일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에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불야세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삼옥오(365)국감’이라고 이를 불렀다. 국민 눈높이·민생·팔장국감 등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3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뉴스

새만금청 “국가산단 3·7공구 산업용지 우선 매립 완료”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단단지 3·7공구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 기업에 부지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입주기업 수요가 증가해 산업용지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부터 인허가,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축하여 3·7공구는 작년 10월, 8공구는 작년 2월 공사를 착공했다.

이를 통해 3공구는 올해 6월, 7공구는 8월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는 새만금 국가산단단지에 입주할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설계를 위한 측량 등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8공구는 수심이 깊어 매립을 위해서는 많은 준설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중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국정감사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안위 직원들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의원의 자리에 놓고 있다.

“농식품부, 수출실적 자화자찬에 몰두 할 때 아냐”

민주 윤준병 의원 “작년 농축수산물 무역적자 50조원 상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수출실적을 연이어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농림축산수출의 무역적자가 5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출실적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농식품 수출 최초 90.1억 불 역대 최대 실적(2023년 12월), △농식품 수출은 금메달(2024년 7월), △농식품 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2024년 9월) 등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전면적으로 홍보해 왔다. 해양수산부 역시 작년 수산물 수출액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30억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120억1,749만 달러(15조 7,669억원)이었으며, 수입액은 501억 9,295만 달러(65조8,531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농림축산수출의 무역적자는 381억 7,546만 달러(50조 86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같이 농림축산수산물 무역적자만



리고 있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연도별 농림축산수산물 무역적자를 보면, △2021년 367억309만 달러, △2022년 435억5,893만 달러, △2023년 381억 7,546만 달러로 최근 3년간 매년 350억 달러(45조9,000억원) 이상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작년 말 ‘90.1억 불 역대 최대 실적’을 홍보했지만, 농림축산물 수입액(438억 1,400만 달러)은 수출액의 4.8 배에 달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올 1월 ‘우리 수산물 수출, 2년 연속 30억 불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수산물 수출 실적을 자랑했지만, 수입 실적과 비교하면 2022년과 2023년 각각 38억893만 달러(4조9,973억원), 33억8,146만 달러(4조 4,364억원) 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작년 국가별 농림축산수산물 무

역적자 현황을 보면 미국이 76억1,393만 달러(9조9,894억원)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46억4,872만 달러(6조991억원), 호주가 36억7,941만 달러(4조8,273억원), 베트남 16억9,903만 달러(2조2,291억원)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작년 기준 농림축산수산물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모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FTA 체결이 무역적자의 주범이며, 농어업인들의 희생을 통해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매년 약 50조원 가까운 농림축산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단순히 수출 실적만을 가지고 치적을 홍보하고 있는 현 행태는 순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 농어업인들의 이목을 위로하는 데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자화자찬이 아닌, 농어업·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이에 따른 실적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와 국제정세 변동에 대비해 농림축산수출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훈 기자

최근 5년간 철도역사 누수 264.8% 폭증

최근 5년간 전국 철도역사에서 1,562건의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에 약 23번꼴로 누수가 발생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의원(익산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역사 누수는 145건에 그쳤지만 2024.1월~8월까지 384건으로 264.8% 증가했다.

누수 발생 원인으로는 노후가 811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막힘(199건), 균열(1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



생한 누수 685건 중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266건(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발생

한 누수 중 69건(22%), 2024.8월까지 발생한 누수 중 197건(51%)은 아직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누수는 연평균 156개 역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누수 발생 역사는 △2019년 115개 △2020년 185개 △2021년 166개 △2022년 153개 △2023년 153개 △2024년 164개로,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났다.

연도별 가장 빈번하게 누수가 발생한 역사는 2019년 백소코역(5회), 2020년 구로역(4회), 2021년 부전역(6회), 2022년 예산역(4회), 2023년 익산역(8회), 2024년 소사역(10회)이었다. /이만호 기자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노선안 확정

김정기 도의원, 주민과 협의... 2030년 1단계 공사 마무리 예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기 의원의 위도면(부안)이 위도면의 주민편의 및 이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9월 30일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1단계 구간 노선(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한 주민설명회에는 김정기 의원과 관계부서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공정서과, 부안군 건설교통과, 위도·식도 주민, 용역사 등이 참석했다.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기상 악화 시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배편의 잦은 결항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주민 및 수산물 등의 이동 편의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잦은 지역 속원 사업 중 하나였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우선적으로 추진 예정인 1단계 구간(위도 진리~계곡, 1.5k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시작됐고 관련 계획 및 노선(안) 검토가 진행됐다. 이후 7월부터는 위도 주민들과 김정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공정서과와 부안군 건설교통과 등이 3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 낸 바 있다.

김정기 의원은 “교통 낙후 지역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지방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주민, 도의원의 끊임없는 소통 및 논의를 통해 지방도 노선을 확정하는 것은 민관협력의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하면서, “이원택 국회의원과 함께 예산확보 및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속한 지방도 개설이 추진되도록 해서 잦은 배편 결항에 따른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소방관 한 끼 3000원대 수두룩’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 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런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 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이만호 기자